

사회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정해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주제어: 사회의 질,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신뢰, 복지지위론, 구조방정식 모형

I. 서론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 투고 2011년 3월 3일, 심사완료 2011년 6월 8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1-B00031).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의 질 논의에서 각 영역의 성격과 구성지표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네 하위 영역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네 하위영역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분면과 사회적 응집성의 관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사회의 질 하위영역에서 인식의 차원과 제도적 결과의 차원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는 사회를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자 할 때, 사회제도와 개인들의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배치 중에서, 이 연구는 특히 복지수급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의 질 4분면 중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한 대처와 삶의 기회(life chances) 제공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Bect et al., 2001: 334-336), 인식 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회의 질 전반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안상훈·정해식, 2010). 한편, 사회적 응집성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뢰의 문제를 포함하는 차원으로서 자연스레 주요 관심 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의 핵심어로서 신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가 그 자체로 명실상부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기능하며, 한 사회의 물질·인적자본과 더불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주요 기제이자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신뢰의 사회적 기능(Coleman, 1988; Putnam, 1993), 신뢰의 여러 차원 중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견고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이재열, 1998; 박종민·김왕식, 2006; 박병진, 2007; 박통희, 2010). 엄모섭(2007)은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구축을 위한 조건들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그의 정리에 따르면, 일관된 규칙에 의한 법치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의 확립, 신뢰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동의 가치와 일체감 및 제재와 감시, 선택적 유인을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연결망의 확대, 사회 구성원 및 제도들의 책임 귀속성이 신뢰 회복과 구축을 위한 주요한 조건들이다. 신뢰는 사회통합의 여러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핵심이다. 이때 사회적 응집은 가용한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자율성, 책임 있는 참여 등과 같이 구성원 모두의 장기적 안녕(well-being)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이다(Council of Europe, 2005: 23).

이상의 사회학적 연구들에서 신뢰의 형성을 거시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하면서 사회적